

## 사료구매자금 1조원 특별 지원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돼야”

### 양돈협, 담보요율 상향·상환기간 조정 필요 제기

인수위원회가 사료가격 안정대책으로 내놓은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와 함께 상환조건 완화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인수위의 사료구매자금 특별지원 방침과 관련, 지난 2월 13일 김동환 양돈협회장과 하태식, 정종극 부회장 등 회장단, 국회 홍문표 의원 구성완 비서관, 맥스피드 김형린 대표, 한국사료협회 홍순찬 기획부장, 양돈협회 정선현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부 지원대책 제시를 위한 긴급 협의회를 갖고 실질적으로 양돈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 담보와 별도로 상환능력 있는 농가에 지원돼야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농신보 활용 양돈농가들의 대출액이 대부분 현행 농신보 규정 개인한도 최대치에 이르고 있거나 이미 농협 등 금융권과 사료업체 등에 담보를 이미 제공하여 담보여력도 없는 만큼 기존의 대출기준하에서 사료구매자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금리 낮추고 상환기간 연장

1조원 특별지원에는 지원조건을 연리 3%, 1년

일시상환으로 정하고, 양돈 1농가당 지원한도액을 최대 2억원으로 정했으나 현재 생산비 및 돈가 추세를 감안할 때 양돈농가가 사료구매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1년 단기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공감, 지원조건을 무이자 지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또한 이번 사료구매자금에 한해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130%에서 230%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고금리 일반사료에 대한 사료 대출금이 연체중인 농가 및 상환하지 못한 농가들도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양돈협회는 이외에도 농·축협 사료 외상 대금 중 금리가 높은 부분을 특별지원 저리자금으로 대체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용정보에 준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세부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정부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경제제2분과위원인 홍문표 국회의원의 한 관계자는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와 담보요율 상향조정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양돈**